

## 필요할 땐 한국인, 책임져야 할 땐 외국인

### 태평로

### 김승범

주말뉴스부장



‘맹탕’이자 ‘코미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청문회에는 선임된 지 일주일 된 미국 국적의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나왔다.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범석의 조 대신이었다. 그는 “한국어를 몰라 소동이 어렵다”며 시작부터 모르쇠 전략을 폈다. 김 의장의 불참 이유를 묻자 “Happy to be here(여기 나오게 돼 기쁘다)”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언어 장벽’을 활용해 소나기를 피해 보려는 게 쿠팡의 의도 아니었을까.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것이다.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온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현실화했다. 현재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김 의장에 게 사대 수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의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벤처 기업 대표 7명의 간담회에는 참석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출석 요구는 계속 거절했다. 쿠팡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전면에서 나서

지 않았다.

그는 미국 국적자다. 일곱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일했다. 2010년 한국에서 쿠팡 서비스를 시작했고 ‘로켓 배송’을 앞세워 매출 40조원대 회사로 키웠다. 쿠팡의 성장 서사는 ‘한국’이라는 시장과 소비자, 노동력,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졌다. 김 의장 스스로도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드러냈다. 2013년 열린 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 “일곱 살 때까지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꼭 한국에 돌아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 한국에 대한 감사·애정은 옛말 일 터지자 ‘外人 지위’ 뒤로 숨어 선택적 태도 언제까지 통할까

와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1년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던 날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 한국은 수익 창출의 무대인지는 몰라도, 책임을 지는 터전은 아니었던 걸까. 그는 현재 한국에선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쿠팡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2021년 6월 17일에는 그가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5시간중 후였다. 쿠팡은 “김 의장의 실제 사임 일자는 5월 말”이라고 했지만 발표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그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빠졌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측은 “한국 법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이 다. 김 의장은 법적 책임 밖에 있다는 취지일 것이다. 미국 본사(쿠팡Inc)는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국 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소매 사업을 소유·운영하고 있다”며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우리의 CEO”라고 했다. 쿠팡Inc의 CEO는 김 의장이다. 한국 쿠팡은 쿠팡 Inc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미국 본사의 의결권 74%를 김 의장이 쥐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의 허점을 활용해 실질적 오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 의장이 필요할 때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앞세우고, 책임져야 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선택적 태도’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김 의장은 ‘글로벌 경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한국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

###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12]

## 성탄을 알리는 경건한 속삭임

둥근 아치형 회벽에 작은 창문 하나가 난 방.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마치 막혀 있던 벽이 열리듯이 그 옆에 그려진 프라안젤리코(Fra Angelico·1395~1455)의 벽화가 드러난다. 실제 천장과 마찬가지로 둥근 아치가 이어진 그림 속 공간에서는 성모 마리아 앞에 나타난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녀가 하느님의 아들, 즉 예수를 잉태했다고 알리고 있다.

기독교 미술에서 이 ‘수태고지(受胎告知)’는 구세주의 도래를 알리는 가장 기쁘고 영광된 장면이다. 그러나 프라안젤리코의 천사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차분하며 우아하다. 놀라운 소식을 듣는 성모 마리아 또한 책을 권 손을 그대로 가슴에 얹고 무릎 꿇고 기도하

던 겸손한 자세로 조용히 신의 뜻을 받아들인다. 성모의 웃은 정갈하고, 주 위에는 기도를 위한 나무 의자 이외에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쿠팡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2021년 6월 17일에는 그가 한국 법인

‘프라안젤리코’는 ‘천사 같은 수사’라는 뜻이다. 본명과 수도명이 따로 있으나, 화풍이 천사처럼 순수하고 경건해서 사람들은 그를 ‘안젤리코’라 불



프라안젤리코, 수태고지, 1440~1442, 프레스코화, 190×164cm,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제3호실.

렀다. 1984년, 교황청에서는 그를 ‘복자 안젤리코’로 공식 시복했다. 성탄은 원래 이처럼 ‘나 홀로 집에’ 조용하고 경건하게 보내도 좋은 날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社 説

##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

민주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특검을 가동시켰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등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방향을 바꿨다.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 사건이 특검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야당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떠넘기다 결국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왔지만 정성적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 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권이 아닌 대법원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방식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통일교 로비보다 더 심각한 대장동 사건 항

소 포기 외압 문제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을 제출했다. 기존 수사를 재탕하고 연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같은 다른 내용도 다수 추가했다. 특검은 기존처럼 민주당 등 여권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사에 이어 기간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췄다. 기존의 특검에 2차 특검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는 1년 내내 특검을 가동하게 된다. 선거 전략 특검임을 감추지도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다며 수사·기소를 분리시켰지만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을 사실상 상설화하면서 중복수사,면지멸이식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전례도 없을 뿐더러 예산과 수사 인력의 낭비는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지방선거용 2차 특검을 위한 물타기용이어서 안 된다.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정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 백악이 무효 원화 폭락, 한국 경제 미래 있는지 묻는 것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8원 오른 1480.1원으로 마감해 8개월 만에 1480원 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였던 4월 9일의 연고점(1484.1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외국계 시총은행의 달러 보유 한도를 대폭 높이는 추가 대책도 환율 오름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환율은 지난 9월 30일 1400원대로 올라선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400원대에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국 이래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은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밖에 없었다.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이 계속된다면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국민연금과 ‘저학 개미’의 해외 투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나온 처방도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단기 대책 중심이었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풀었고,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엔 귀를 닫았다. 근본 대책에도 소홀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의

거울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1%대 성장률에 허덕이는 저성장 기조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단기 대중 요법만 내놓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없다. 강성 노조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독재하고 있고, 유망한 신산업은 전부 기득권과 규제에 막혀 있다. AI 시대 핵심인 전력 문제조차 탈원전 망령에 가로막혔다. 노란봉투법과 경직적 주 52시간제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그러니 2021년부터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늘어났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가 올 들어 전년 대비 18% 급감했다. 외국인이 주식뿐 아니라 실물 투자도 주저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추락했다.

결국 원화 가치를 지키는 힘은 한국 경제의 매력도에서 나온다. 경제 체질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 서학개미뿐 아니라 외국인도 제 발로 돌아올 것이다.

## 국군 희생으로 그어진 휴전선, 한 정권이 양보할 수 있나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기준을 복한 측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서를 전방 부대에 지시했다. 최전방 부대는 그동안 우리 군 지도에 표기된 MDL을 바탕으로 대북 작전을 했다. 그런데 지침서에는 우리 군 MDL과 유엔군사령부 MDL이 다르면 둘 중 더 남쪽 선을 MDL로 간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MDL이 기존보다 남쪽으로 수십 미터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분계선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1292개의 표지판을 세워 경계를 구분했는데, 유실돼 지금은 200여 개만 남아있다. 그사이 우리 군과 유엔사는 각자 MDL을 측량해 지도에 표기해왔다. 현재 우리 군과 유엔사의 분계선은 60%가량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은 측량을 핑계로 분계선을 꾸준히 침범했다. 작년 4월부터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분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는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MDL 침범이 더욱 잦아졌

다. 이번 지침서 하달은 북한의 침범을 용인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경선 자진 후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다.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일대에서 국경 분쟁으로 난투극까지 벌였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수십 미터의 차이를 두고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합참의 지침서 하달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대북 방송을 50년 만에 중단했고, 북한이 일방 피기했던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언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미뤘고, 필요하면 중단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더니 국경선 후퇴나 마찬가지로 분계선 지침서까지 만들어 하달했다. 지금 분계선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국군 장병이 몇 미터라도 더 나아가려고 희생했다. 이번 지침서는 그 무거운 희생을 무시하는 가벼운 결정이다. 한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우파 정당상상 처음

# 국힘 책임당원 100만 ... 장동혁 취임 후 20여만 급증

탄핵 여파 70만명으로 급락 | 반전! 수도권-2030 증가 두드러져 | 당내 배신·분탕질 향한 반감이 원인

뉴데일리  
newdaily.co.kr



◀ 100만 당원이다. 100만 대군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국힘이 진정한 정당으로 전 환하고 있다. 정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 켓GPT

### 엄청난 사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달 중 100만 명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일반당원이 매달 1000원 이상의 당비를 3개월간 납부하면, 투표권 있는 책임당원이 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우파 정당 책임당원 100만 시대》를 맞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힘 책임당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해인 23년 말의 1만 명 대까지 늘었다. 그러다 ① 4.10 총선 참패 ②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가결 ③ 현재 탄핵 결정 ④ 조기 대선 패배 뒤 70만 명 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특히 정동우파 핵심 지지층이 국힘 행태에 실망, 당을 떠났다. 지난 8월 말 국힘 전당대회 책임당원 수는 75만 명이었다. 그러다 장동혁 대표 취임 3개월 만에 20만 명 이상 급증했다. 엄청난 《사건》이다. 대통령·당 총재를 겸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당 대표 거쳐 대통령 된 박근혜, 그날 당 대표 지낸 이회창 홍준표 황교안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역대 우파 정당 대표 그 누구도 못했던 일. 장동혁이 《100만 책임당원 우파 정당 첫 대표》이다.

### 좌파 정당은 170만

한국 우파 정당은 좌파 정당에 비해 당원 중심 정당 성격이 취약하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170만 명. 텃밭인 호남과 호남 출신 많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에 의해 이뤄진다. 당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없다. 본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민주당 의원·당협위원장들은 당원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 “장동혁-김민수 지킨다”

국힘 전당대회 후 이당 당원들을 분석해 보자. 전통적 기반인 영남은 물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규 입당이 크게 늘었다. 연령으로도 노인 위주란 인식을 깨고, 우파 이념으로 무장한 2030이 대거 입당했다. 이들은 《각성한 청년층》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폭발적 《입당 붐》은 무엇 때문일까. 내부총질자 응징과 장동혁-김민수 새 지도부 수호를 위한, 신규 입당(또는 재입당) 급증이다.

### 주호영의 헛소리

《책임당원 100만 명 시대》의 정치적 파장은 크다. 무엇보다 당원들을 《장기판의 줄(券)》로 여기며 경선 당원 투표 비율 확대에 노골적 반감을 표시하던 국힘내 정치 기득권 세

력은 거대한 《당원 혁명》의 흐름에 전전긍긍 중. 얼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이들은, 당원 자국 은행을 극히 자제하고 있다.

최근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 당원-자유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의 경우, 22년 12월 원내대표 당시 “100만 당원이면 당심이 민심”이란 발언이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주호영은 대구시장 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원들의 격양된 분위기에 명함도 내밀기 어렵게 됐다.

### 나경원의 소신

장동혁 지도부의 가장 큰 원군(援軍)은 당원-자유시민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의 79.9%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반면, 반대는 14.0%에 그쳤다는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방선거 전략에서도 당원들 역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당심 70% 이상 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심 70% 이상 상향은 변함없는 소신이다. 책임당원이 100만 명. 이 100만 명이 누구인가. 나라가 걱정돼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들이다. 우리당이 제일 가까워서 제일 먼저 걱정하고 존중해야 할 국민이다. 당심이 민심이다. 당원 없으면 우리 당도 없다. 우리 당 후보도 없다.”

그는 당심 비율 상향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 ① 당세 확장 ② 여당 당세가 세고 조직화된 개말이 있는 현실에서 높은 역선택 위험 ③ 오차 범위 밖으로 빗나간 일반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지방선거 특수성도 강조했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지방선거는 50% 안팎. 80% 육박 대선과는 다르기에, 당원 존중·당력 결집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 가야 할 길 아직 멀다

국힘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170만 권리당원》과 비교하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국힘은 더 많은 국민이 입당하고 싶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권의 폭정·실정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힘 당원들이 자발적·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당내 개혁과 선거 승리에 필요한 핵심 변수이다. 이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2월 21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8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